



“에너지가격체계 개편후 경유승용차 시판해야”

협회-환경부출입기자 간담회

경유차환경위원회 합의안 수용 촉구

● 한국 LPG가스공업협회 ●

협회는 4월 10일 환경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에너지가격체계 조정없는 경유승용차 허용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보도자료를 게재한다.

LPG업계가 현행 에너지가격체계를 먼저 개편한 다음 경유승용차 시판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LPG가스공업협회(회장 남석우·대흥에너지산업 대표이사)는 10일 환경부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지난달 27일 경제정책조정 회의에서 결정된 경유승용차 허용안은 민·관 협의체로 구성된「경유차 환경위원회」가 각고의 노력 끝에 만든 합의를 무시한 처사로,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면서 “경유차 환경위원회에서 제시한 에너지가격체계 개편 등 대기오염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경유승용차를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유차 환경위원회는 경유차에 의한 대기오염 문제를 사회적 합의로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환경단체·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

로 지난 2월14일 ▲휘발유:경유:LPG가격비를 100:85:50으로 조정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법의 조속 제정 ▲매연후처리장치(DPF) 부착 ▲경유승용차 생산·판매 쿼터제 등을 합의안으로 도출해낸 바 있다.

협회는 경유차 환경위원회 합의안이 무시된채 경유승용차가 2005년에 허용될 경우, 선진국에 비해 국내 경유가격이 너무 저렴해 대부분의 휘발유차와 LPG차량은 경유승용차로 전환(환경부, 휘발유승용차→경유승용차로의 전이율 최대 70%까지 예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럴 경우 OECD국가중 최악인 국내 대기질 상황은 폭증하는 경유차로 인해 더욱 악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며, 특히 일반차보다 하루 주행거리가 몇배 많은 영업용택시의 상당수가



경유승용차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할 것이란 분석이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차량중 경유차는 인체에 치명적인 미세먼지를 100% 뿜어내고 있으며, 질소산화물도 경유차가 휘발유 차량의 80% 이상을 더 배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협회는 또한 현 상태에서 경유승용차가 허용되면 그동안 정부의 대기오염 개선정책에 맞춰 지난 99년부터 버스, 청소차, 마을버스, 중소형 화물차, 승용차 등의 LPG전용 저공해 엔진개발에 노력해 왔으나 왜곡된 국내 가격체제로 인해 LPG가격이 경유보다 경쟁력이 없어짐에 따라 저공해 LPG차량 연구개발의 지가 좌절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네덜란드·이탈리아·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저공해 LPG차량에 대해 다양한 세제혜택 등의 지원을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LPG차량의 존립기반을 뒤흔드는 정책을 결정하여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LPG차량 대부분이 경유승용차로 전환될 경우 전국에 설치돼 있는 1천여개 충전소 인프라가 무용지물이 되어 LPG산업이 붕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협회는 경유차환경위원회의 합의는 '논리적 판단'에 근거한 것이나, 경제정책조정회의는 '힘'에 근거한 결정으로 논리에는 이겼지만 힘에 밀린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러한 비논리적 힘에 의한 정책결정의 후유증은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해야 하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 LPG산업은 예기치 않은 몰락을 맞이해야 하는 실정임을 호소하고 있다.

협회 남석우회장은 "경유승용차 허용문제는 우선 선진국처럼 환경친화적으로 가격체계를 개편한 다음 논의돼야 할 것"이라며, "특히 경유와 LPG간 연비를 고려한 경쟁가격 수준에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